

# 원자력 사업 추진체제의 조정

김 세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야 하고, 당장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또 우리가 축적한 기술을 발판으로 해서 해외 원전 시장에도 진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 빨리 원자력 산업계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총체적인 협조 체제를 갖추어 국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

지 난 6월 25일 제245차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우리 나라 원자력 사업을 한층 높은 차원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참으로 중요하고도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지난 10여년간 끝없는 논쟁으로 우리 원자력 산업계를 혼란시켜 왔던 원자력 사업 추진 체제의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한 용단을 내린 것이다.

이번에 결정된 내용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 개발 기능과 사업 기능을 분리하여, 연구 개발 기능은 연구소에서 계속 수행하되 사업 기능은 산업체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해 온 방사성 폐기물 사업은 한국전력공사로 이관하고, 원자로 계통 설계 사업은 한국전력기술(주)로 이관하며, 핵연료의 설계 및 제조 사업은 한국원전연료(주)로 이관키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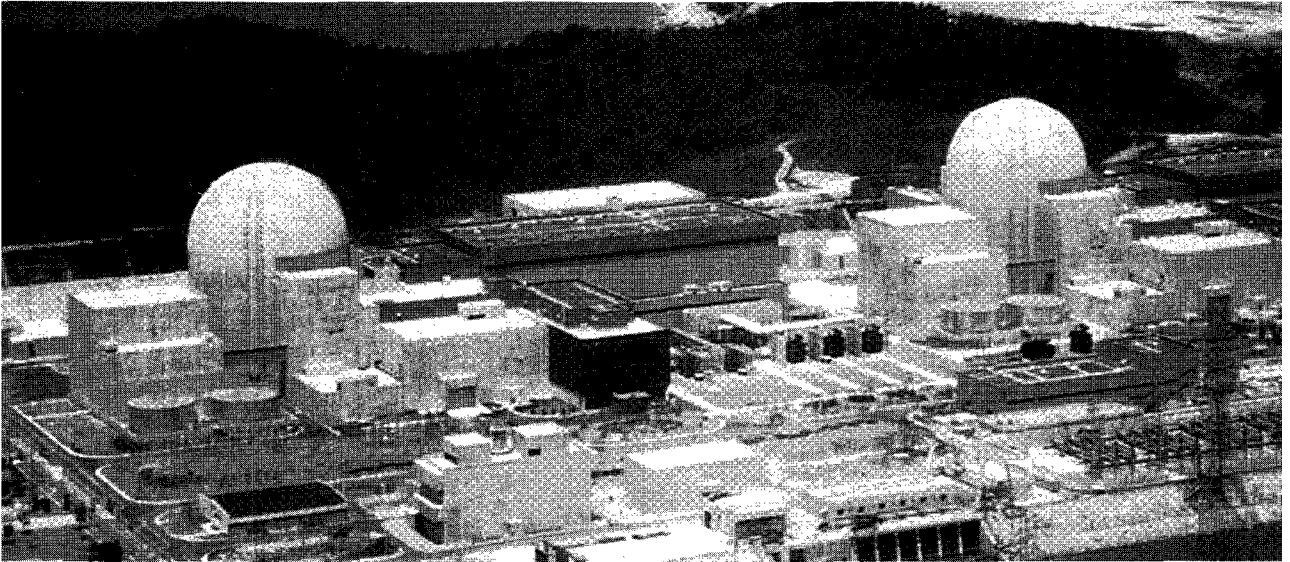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

의 연구 개발 업무에 전념토록 하되,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연구개발기금을 설치하고, 한국전력공사가 매년 전년도 원자력 발전량 kWh당 1.2원을 연구개발기금으로 출연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97년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해야 할 연구 개발 자금은 약 840억원이 되며, 96년도 연구 개발 자금 711억원 보다 100여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한편 통상산업부와 과학기술처는 이와 같은 조정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 9월까지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정기 국회에 상정하고, 관련 기관들은 금년 9월까지 인계 인수 계획을 작성하여 늦어도 금년말까지 모든 인계 인수 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했다.

이로써 우리 원자력 산업계는 지난 85년 이후 10여년간 끌어오던 내부의



한국 표준형 원전의 기본 모델인 영광 3·4호기의 모습. 원자력위원회는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개발 기능과 사업 기능을 분리, 연구개발 기능은 연구소에서 계속 수행하고 사업 기능은 산업체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원자력사업 추진체제의 기능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이며,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원자력 산업계 내부의 이와 같은 갈등의 기원은 지난 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5년 당시 정부는 원자력 발전 기술을 자립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때 관련 업체간 역할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종합적인 사업 관리를 맡고, 원자력발전소 전체에 대한 설계는 한국전력기술(주), 원자로 계통 설계 업무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로 등 기자재는 한국중공업(주), 그리고 핵연료의 설계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맡되 제조 업무는 한국원전연료(주)에서 맡아서 하도록 했던 것

이다.

이러한 계획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우리 기술로 원자력발전소를 설계·제조 및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가 바로 한국 표준형 원자력 발전소이며, 그러한 기술 자립을 이루었기에 우리 원자력계의 최대 현안인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핵연료의 설계·제작 기술도 확보하여 지금은 국산 핵연료를 생산·공급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추진하던 굴업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 사업이 뜻하지 않은 활성 단층의 발견으로 도중에 중단되는 불운을 겪기는 했지만 방사성 폐기물 사업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했다.

연구 개발 기능을 수행해야 할 연구소가 사업 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원자로 설계 기술을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이식시킬 때 기술 전수 비용을 한국전력공사가 모두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기술을 활용한 원자로 설계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막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고, 그것도 애원을 하다시피 일을 시켜야만 했다. 거기에다 한전은 또 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막대한 연구 개발 자금도 지원해야만 했다.

연구 개발 자금은 연구 개발 자금대

로 지원하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지불해야 하는 모순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다. 핵연료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반면에 연구소는 나름대로 용역은 용역대로 비싼 대가를 받아내려 했고, 연구 개발비는 연구 개발비대로 더 많이 받아내려다 보니 사사건건 마찰이 일어나고 서로 대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드디어는 해외 수주 경쟁에서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되었으며,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서로 주계약자가 되겠다고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보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연구와 사업은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점점 더 그 강도를 더해 갔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논란을 거듭해 왔지만 시원한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연구소가 필요한 기술을 연구 개발 하면서 그 기술을 이용한 설계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기술 응용의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보니 원가 개념이 희박해지고, 사업 수행의 능률이 떨어지고,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는 단점들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

연구소측으로서는 연구와 사업을 분리한다는 것은 막대한 손실인 만큼 연구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사업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한국전력공사측으로서는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별도로 지원하

고 있는 만큼 연구소는 연구 개발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되, 설계 사업은 산업체로 이관시켜 사업이 지니는 특성을 살려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더욱이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과학기술처의 산하 기관이요, 한국전력공사는 통상산업부의 산하 기관이라는 점에서 부처간 의견 조정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연유로 해서 원자력 사업 체제 조정 문제는 해를 거듭하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제자리에 맴돌면서 내부 갈등만 증폭되어가던 차에, 마침 범정부 차원의 기능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원자력 산업계로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임에 틀림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야 하고, 당장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또 우리가 축적한 기술을 발판으로 해서 해외 원전 시장에도 진출해야 한다.

머지 않아 정부조달협정이 발효하게 되면 국내 원전 시장도 개방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외국 업체의 진출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는 물론이요, 국내 시장에서도 외국 기업체들과 경쟁을 해야만 한다.

이제는 원자력 사업도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 과감한 경영 혁신과 경쟁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 빨리 원자력 산업계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총체적인 협조 체제를 갖추어 국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이번의 조치가 한국원자력연구소로서는 불만이요, 불편한 점도 많겠지만 국가적인 견지에서는 바람직한 조치이고 보면,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루 빨리 업무 이관 작업을 서둘러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물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업무 이관과 체제 정비 작업을 최대한 지원하여 할 것이며, 혹시나 이번 조정 조치로 인해 기술 인력이 분산되거나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신분 보장과 처우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줄로 안다.

그리고 원자력 산업 체제 조정은 이번의 산업체 기능 조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본다.

통상산업부와 과학기술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원자력 행정 기능도 하루 빨리 일원화가 되어야 하며, 정부 기능을 한 부처로 일원화해야 원자력 사업을 일관성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원자력은 원자력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다고는 하나, 따지고 보면 원자력도 에너지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보면, 원자력 정책도 석유나 가스·전기와 같은 에너지 정책의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